

# KWDI

## 해외통신

2020년 2월 2차 (2020.2.16 ~ 2.29)



### 독일 GERMANY



####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2020년 디지털 여성 아카이브 및 청소년·남성 폭력피해자 지원 예산 확대

채혜원 독일통신원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가 2020년 집중적으로 지원할 프로젝트 중 일부로 디지털 독일 여성아카이브 및 폭력피해 청소년·남성 지원사업을 선정했다.

첫 번째는 '디지털 독일 여성아카이브(Digitale Deutsche Frauenarchiv, 이하 DDF)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관한 것이다. 독일 정부는 2020년부터 '디지털 독일 여성 아카이브' 운영을 위해 185만 유로(한화 약 23억 7,260만 원)를 지원한다. 프란치스카 기파이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정책은 과거에 대해 아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며, 이에 독일 여성운동이 무엇을 위해 싸워왔는지 보여주는 아카이브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DDF 홈페이지에서는 독일 여성운동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누구나 볼 수 있는데, 독일 여성 운동사에서 어떤 여성들이 조직을 설립하고, 어떻게 시위를 조직해왔고, 어떤 글을 썼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자료가 담겨있다. 성평등을 위해 새로운 길을 개척해온 여성들의 개인사와 활동사, 실패와 성공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도 담겨 있다. 또한 독일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일 여성 조직과 협회, 관련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정보도 찾아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지원 프로젝트는 청소년과 남성을 위한 상담 지원 확대이다.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2022년 2월부터 중순까지 남성연방포럼(Bundesforum Männer)의 '성평등 정책 내 남성 네트워킹 및 상담 프로젝트'에 115만 유로(한화 약 14억 7,486만 원)를 지원한다. 지원 목표는 공공 및 개인 공간에서 폭력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 및 남성을 위한 상담 질을 높이고 전국 전문 기관의 네트워킹을 구축을 위해서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연방 전문 남성폭력피해보호센터(Bundesfach- und Koordinierungsstelle Männergewaltschutz)에서는 폭력 피해자인 남성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전문가 및 협력 사무소를 설립하고 있다. 각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필요한 새로운 지원 구조를 조사해 기존 시설보다 남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연방 남성폭력피해보호센터에 2022년 9월까지 150만 유로(한화 약 19억 2,373만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한다.

#### 참고자료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20), "Gleichstellungsjahr 2020: Partnerschaftlich für gerechte Chancen von Frauen und Männern",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presse/pressemitteilungen/gleichstellungsjahr-2020-partnerschaftlich-fuer-gerechte-chancen-von-frauen-und-maennern-/144542> (검색일 : 2020.2.26.).
- Männergewaltschutz(2020), [www.maennergewaltschutz.de](http://www.maennergewaltschutz.de) (검색일 : 2020.2.14.).
- Bundesforum Männer e.V.(2020), [www.bundesforum-maenner.de](http://www.bundesforum-maenner.de) (검색일 : 2020.2.14.).

현재 독일 전역에는 폭력 피해 남성과 자녀가 함께 머물 수 있는 보호 거주 시설이 총 17개 운영되고 있다. 지역은 드레스덴, 라이프치히, 뉘른베르크, 바이센베르크, 슈트트가르트 등 다양하다. 이중 드레스덴 시설이 2016년 처음 문을 열었으며, 나머지 보호 거주 시설은 대개 2018년과 2019년에 운영을 시작했다. 2020년에는 쾰른과 뒤셀도르프에 보호 거주 시설이 추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어 독일 정부는 이전보다 소년과 남성에게 대한 맞춤 상담을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지원도 시작한다. 인력 양성을 위해 지원하는 곳은 독일 사회복지 가톨릭 연합(SKM Bundesverband e.V.)이며, 예산 규모는 2022년 10월까지 약 80만 유로(한화 약 10억 2,599만 원)이다. 이 외에도 올해 안에 정부 차원의 '성평등 전략'을 채택할 계획이며, 남녀의 동등한 기회 보장을 위한 연구소 설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20년 하반기에는 독일이 유럽연합(EU) 순회 의장국을 맡기 때문에 유럽연합이사회와 함께 남녀평등에 관한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프란치스카 기파이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여전히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적게 임금을 받고, 주요 직책에서 과소평가되며, 더 많은 여성이 파트타임 관계에서 벌어지는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한 여성정책에 대한 더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남성 또한 폭력 상황에서 보호받고 일·가정 양립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 예산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유럽 EUROPE



### 유럽연합 의회, 임신중지 관련 잘못된 정보를 확산하는 ‘하트비트센터’에 대해 제재 요구

체 헤 원 독일 통신원

유럽연합(EU) 의원들이 임신중지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전 세계 ‘위기임신센터’에 대한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논의는 영국의 비영리 시민 언론 단체 ‘오픈 데모크라시(openDemocracy)’의 관련 보고서가 2월 초 공개되면서 촉발됐다. 오픈 데모크라시는 취약한 임신부로 위장해 5개 대륙 총 18개국에 있는 위기임신센터 중 일부에 방문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센터에서 임신중절수술을 하면 암이나 정신 질환에 걸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알리고 있었다. 이와 함께 상담을 원하는 여성에게 성경 원칙과 기독교 윤리를 강요했으며 임신, 건강 등에 관해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참고자료

- openDemocracy(2020.02.12.), “European lawmakers demand action on anti-abortion misinformation”, <https://www.opendemocracy.net/en/5050/european-lawmakers-demand-action-anti-abortion-misinformation/> (검색일 : 2020.2.24.).

오픈 데모크라시가 조사한 센터들은 트럼프 정부와 관련이 있는 미국의 하트비트 인터내셔널(Heartbeat International) 계열사다. 중남미에서는 휴먼라이프 인터내셔널(Human Life International)이라는 이름으로 멕시코,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및 코스타리카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트비트 계열사는 이탈리아, 스페인 및 크로아티아를 비롯한 여러 유럽연합 국가와 루마니아, 우크라이나에도 있다.

- DW(2020.02.11.),  
“EU lawmakers slam abortion  
‘misinformation’ network”,  
<https://www.dw.com/en/eu-lawmakers-slam-abortion-misinformation-network/a-52330320>  
(검색일 : 2020.2.24.).

오픈 데모크라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센터는 강간이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에게도 임신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파트너에게 심한 학대를 겪고 있는 여성으로 위장한 오픈 데모크라시 조사자는 센터 상담 시 “당신은 피해자이지만 임신중지를 선택할 경우 당신 역시 폭력을 가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을 들었다.

임신중지 권리를 위한 단체 활동가들은 “하트비트 계열사 센터들은 괴로운 상황에 놓인 여성으로 하여금 원치 않는 임신 상태를 지속하도록 잘못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렇게 위험하고 폭력적인 방법은 여성을 무력화시키고 여성의 건강과 존엄성을 파괴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러 유럽연합 정치인들과 유럽연합의회 의원들은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픈 데모크라시 보고서가 발표된 후 여러 유럽의회 의원은 하트비트 계열사 센터가 인권 침해 및 성차별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확실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에 서명했다.

유럽의회 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사회당 그룹(S&D, Socialists and Democrats), 녹색당/자유동맹 연합(The Greens/European Free Alliance), 리뉴 유럽 그룹(Renew Europe Group) 의원들이 서명했다. 의원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많은 여성에게 임신 중지가 추가적인 장애를 유발한다는 잘못된 정보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난했다.

벨기에의 힐데 유럽의회 의원은 “임신중지를 고민하는 여성을 기만하고 허위 정보를 제공한 센터들은 도덕적으로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위협을 가했다.”고 지적하며 “의회 의원들은 정치인으로서 모든 정치적, 법적 도구를 사용해 이러한 관행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한에는 일부 시설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오픈 데모크라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하트비트 계열사 센터는 공공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에는 400개가 넘는 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 센터가 공립병원, 여성보호소, 가족상담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 국제가족계획연맹(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파트너십 및 전략 책임자인 아이린 도나디오는 “하트비트 관련 조직은 정부 자원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공공기관으로 들어가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트비트 인터내셔널 측은 독일 언론 ‘도이치벨레’와의 인터뷰에서 “임신중지가 한 인간인 아기의 삶을 끝낸다는 것은 진실이다”라며 “우리는 전 세계 60개국 이상의 임신 관련 지원 단체와 협력해 국가별 관련 법과 문화적 규범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별 혐의에 대해서는 대응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번에 오픈 데모크라시가 조사를 벌인 18개 국가는 아르헨티나, 캐나다,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에콰도르,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멕시코, 나이지리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스페인, 남아프리카, 한국, 우간다, 미국 및 우크라이나이다.

## 그리스 GREECE



### 그리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 출산시 2000유로 출산장려금 지급

박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 그리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자녀 한 명을 출산할 때마다 부모에게 2000유로(한화 약 27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최근 그리스는 저출산 현상으로 총인구가 감소세를 보여왔는데, 2011년부터 그 감소세가 더욱 가파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출산율은 2017년 기준 가임여성 1명당 1.35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최근 몇 년간 줄어 들고 있다. 참고로 그리스 여성의 평균 출산 나이는 2008년 28.8세에서 2016년 30.3세로 상승했다.
- 그리스에서는 고령화 역시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만약 그리스의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유럽연합통계청(Eurostat) 추정치에 따르면 총인구는 현재 약 1천7십만 명에서 2050년까지 약 8백만 명으로 줄어 들고,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약 3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7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에 불과했다는 사실과 비교해보면, 지난 몇십 년간 인구피라미드에 큰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Kyriakos Mitsotakis) 총리가 이끄는 이번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 본 출산장려금 지급제도는 그리스 시민, 유럽연합(EU) 국적자뿐만 아니라 그리스에서 거주하고 있는 비유럽연합 국적자도 동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산장려금 2000유로는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단, 모든 부모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가구 소득이 연간 최대 4만 유로를 넘지 않는 경우에 자격이 주어진다. 그리고 비유럽연합 국적자 부모의 경우 그리스에서 12년 거주한 경우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 그리스 정부는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이 향후 부모들이 자녀를 출산한 뒤 초기 몇 년간 자녀를 기르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에 유용하게 쓰이면서 일종의 출산 인센티브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제도를 추진하는 데는 연간 약 1억8천만 유로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그리스 국민총생산(GDP)의 0.1% 가량에 해당한다.

#### 참고자료

- Euronews(2020.02.05),  
“Greek government to pay families €2000 for every newborn baby”,  
<https://www.euronews.com/2020/02/05/greek-government-to-pay-families-2000-for-every-newborn-baby>  
(접속일 : 2020.02.20.)
- Greek City Times(2020.02.05),  
“Greek government begins handing out baby bonus to boost declining birth rates”,  
<https://greekcitytimes.com/2020/02/06/greek-government-begins-handing-out-baby-bonus-to-boost-declining-birth-rates/>  
(접속일 : 2020.02.20.)
- Greek Reporter (2020.01.29),  
“Parliament Approves 2,000-Euro Benefit for Every Child Born in Greece”,  
<https://greece.greekreporter.com/2020/01/29/parliament-approves-2000-euro-benefit-for-every-child-born-in-greece/>  
(접속일 : 2020.02.20.)

📌 **도나 미카일리두(Domna Michailidou)** 그리스 노동사회부 차관(Deputy Minister for Labour and Social Affairs)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인구 문제는 단순한 국가 자존심이 아니라 국가 보존의 문제’라는 점을 언급했다. 미카일리두 차관은 이번에 추진되기 시작한 출산장려금 제도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 관련 혜택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녀는 “청년인구가 생산성과도 연관이 있는 만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은 국가의 경제성장에 있어 최우선과제인 셈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출산율과 인구피라미드는 연금제도와의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리스의 미래는 더욱 암울하며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더불어 미카일리두 차관은 “정부는 여성들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집에서 자녀를 기르는 것을 택한다면 이를 존중한다. 하지만 출산 후 다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부모가 재정적으로 자녀 돌봄 서비스에 쓸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방안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스 정부는 금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2000유로 상당의 출산장려금 지급제도 이외에도 여성의 자녀 돌봄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증설과 같은 다른 정책들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 New Greek Television(2020.01.29), “Law on 2,000 euro benefit for every child born in Greece passes in parliament”, <https://www.newgreektv.com/news-in-english-for-greeks/greece/item/31670-law-on-2-000-euro-benefit-for-every-child-born-in-greece-passes-in-parliament> (접속일 : 2020.02.20.)
- The Guardian(2020.02.04.), “It’s national preservation’: Greece offers baby bonus to boost birthrate”,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feb/04/its-national-preservation-greece-offers-baby-bonus-to-boost-birthrate> (접속일 : 2020.02.20.)

## 캐나다 CANADA



### 캐나다 여성부, 법관 자격 요건으로 성폭력 교육 이수 의무화한 법안 발의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 2020년 2월 6일 캐나다 여성부(Ministry of Women and Gender Equality)는 고등법원 판사의 자격요건으로 성폭력 관련 교육 훈련(training on sexual assault myths and law) 이수를 의무화하는 법안 Bill C-5를 발표했다. 여당인 자유당은 해당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주 고등법원 판사 후보들에게 성폭력에 대한 교육 훈련을 받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2월 6일 마리암 몬세프(Maryam Monsef) 여성부 장관은 ‘C-5의 입법 절차가 완료되면 앞으로 더 많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한 법적 심판을 받도록 앞으로 나설 것이며 재판 동안 그들의 존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 C-5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해당 법안의 입법화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캐나다 상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주 고등법원의 판사가 되기 위한 자격조건은 변호사로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인데, 이 법안은 온타리오 고등법원의 판사 임명 자격 요건에 성폭력 관련 교육 훈련 이수를 포함한다. 또한 정부안은 고등법원 판사 후보자들에게 성폭력의 사회적 맥락과 관련 법률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이수할 것을 약속하게 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이 법안이 통과 되더라도 하급법원 현직 판사들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할 수는 없다. 캐나다 헌법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어, 연방 사법부 기관만이 사법적 교육을 주관할 수 있고 입법부가 이에 간섭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참고자료

- Mcleans(2020.02.06.), “Bill C-5: Should the Canadian government train its judges?”, Bill C-5: Should the Canadian government train its judges?”, <https://www.macleans.ca/opinion/bill-c-5-should-the-canadian-government-train-its-judges/> (검색일 : 2020.2.19.).
- Global News(2020.02.07.), “What Bill C-5 could mean for survivors of sexual assault”, <https://globalnews.ca/news/6517266/bill-c-5-sexual-assault-survivors/> (검색일 : 2020.2.19.).

- The Guardian(2017.03.09.),  
"Canada judge resigns over 'keep  
your knees together' comment in  
rape trial",  
[https://www.theguardian.com/  
world/2017/mar/10/canada-  
judge-resigns-keep-your-knees-  
together-comment-rape-trial](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7/mar/10/canada-judge-resigns-keep-your-knees-together-comment-rape-trial)  
(검색일 : 2020.02.19.).

이번 정부안 C-5는 2017년 로나 엠브로스(Rona Ambrose) 보수당 의원이 개인발의한 C-377을 수정한 법안이다. 2017년 엠브로스 의원 안은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하였으나, 상원에서 거의 2년을 계류하다 입법화에 실패했다. 여성부 장관은 이번 안의 의도가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이 법의 심판대 앞으로 나오게 하려는 것이며 초당적 협력을 필요로 하는 사안임을 강조했다. 엠브로스 의원 안은 2014년 캐나다를 떠들썩하게 했던 로빈 캠프(Robin Camp) 판사 사건 이후 발의된 것이다. 캠프 판사는 강간 사건 재판 중 증언을 하는 피해자에게 강간을 당하지 않기 위해 '왜 다리를 오므리지 않았느냐', '왜 골반을 뒤틀지 않았느냐' 등의 질문을 하면서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피해 여성 또한 강간을 원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등의 발언을 했다. 또 그는 해당 사건의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여성을 점잖게 대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훈계를 해 엄청난 물의를 빚었다. 2015년 상급 법원은 해당 사건의 재심을 명령하였고, 같은 해 네 명의 법학과 교수들이 캠프 판사에 대한 캐나다 연방 사법 위원회(Canadian Judicial Council) 청원을 주도해 그에 대한 자격심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16년 위원회는 캠프 판사가 직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캠프 판사는 판사직을 사임했다. 그러나 2017년 재심에서 해당 사건 피해자의 증언이 일관되지 않고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다른 판사가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캠프 판사 사건은 판사들조차 성폭력 피해자 움을 강요하는 고정관념(피해자가 노출이 많은 의상이나 만취 상태 등으로 강간을 자초하는 것 아니냐는 등)에 젖어 있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표출된 사건이었다.

캠프 판사 사건으로 인해 판사와 같은 고위직 전문직종 종사자들도 평생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촉발되었으며 2018년 연방 사법위원회는 새로 임명된 판사들에게 임명 후 최초 5년간은 수업을 듣도록 했다. 캐나다 사법회(National Judicial Institute) 또한 성폭력과 관련 형법 수업들을 개설하여 수년간 법관들에게 제공해 오고 있으며, 성폭력의 사회적 맥락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법률 교육 외에 성폭력의 근본이 되는 차별, 빈곤과 원주민 이슈 등 또한 교육하고 있다.

C-5가 현존 교육 프로그램들과 엠브로스 의원 안과 차별되는 점은 입법부가 교육 이수율 자격 판사 임용 자격 요건으로 지정함으로써 이제까지는 자발적으로 혹은 권유에 그쳤던 교육이 사실상 법률로 의무화된다는 점이다.

캐나다에서 성폭력 범죄의 신고율을 매우 낮으며, 신고율이 저조한 큰 이유 중 하나로 전문가들은 법관들의 젠더감수성 결여를 들고 있다. 즉, 현재 사법부가 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 증언을 받는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트라우마가 되려 심화 된다는 것이다. 캠프 판사 사건과 같이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치욕스러운 재판 과정을 버텨야 하지만 가해자들은 종종 아예 증언에 불리지도 않거나 무죄가 선고되다 보니 성폭력 피해를 당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밀턴 지역 성폭력 센터(Sexual Assault Centre of the Hamilton Area)에 의하면 성폭력 사건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천 건 중 세 건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성인보다 더 많은 재판을 견디어야 하며 이때 법관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더욱 절실하다. 여성부는 C-5의 통과를 더 이상 지체될 수 없으며 피해자들과 전문가 등의 조언을 바탕으로 조속히 교육 내용 꾸릴 것이라 밝혔다.